



「르포 국립공원」 연재를 끝내고

國立公園관리 內務部이관과 問題点

지방稅收 늘리려 公園開發확대 可能性 위락시설 계속 지으면 環境 파괴 加速化

世界日報連載物에 비친 모습

국립공원훼손의 큰 要因 두가지

- ① 利用客에 의한 自然汚染
- ② 開發에 의한 環境變化

국립공원은 보전보다는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그 적정관리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국립공원을 훼손시키는 두가지 큰 요인은 이용객에 의한 자연오염과 개발에 의한 환경변화로 볼 수 있다. 이용객들이 저지르는 오염행위는 결국 그 피해가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각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결정적인 훼손요인인 무분별한 개발행정은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제어할 장치가 아직 크게 미흡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구나 올부터 국립공원관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연훼손의 정도가 오히려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지방자치제와 맞물려 가중되고 있다.

공원관리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기존의 건설부관장하에서는 보전보다 개발에 치중하게 될 뿐더러 공원내 쓰레기수거가 공원관리공단의 역량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지방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때 불교 조계종단이 山門을 걸어닫으면 서까지 크게 반발했듯이, 내무부로의 이관은 오히려 더 많은 개발로 인한 훼손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내무부로의 이관은 결국 공원관리가 지방행정기관의 관장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증대를 위해 공원개발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짙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확보키 위해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지역조성을 핑계로 대단위 위락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환경파괴는 가중될 것이다.

또하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내무부 본부기구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내무부는 국립공원관리업무를 맡을 기구를 신설, 업무영역을 넓히려 들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관리주무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능이 훨씬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공원관리업무를 내무부 이관이 결정된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3개월여 건설부와 내무부 사이에서 업무인수와 조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원현장의 관리를 맡아보고 있는 전국 20개 관리공단사무소는 눈치보기로 행정공백상태에 있다.

내무부안에 공원관리업무를 맡아볼 기구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공원행정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내무부장관에 업무보

고를 하게 될 4월초 이후에나 내무부의 업무관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드시 보호되지 않으면 안될 소중한 자연환경을 앞에 두고 드러난 이러한 개발피해예상과 행정의 공백상태를 보는 국민들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3.24 世界日報)

閑麗海上(南海)

국립공원종합개발 發表후

外地人들 외딴섬들 70%買入, 값폭등 공동 漁業權까지 차지, 漁民生계 위협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남해안일대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새로운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일대 외딴섬들이 투기열풍에 시달리고 있다.

경남 남해안일대 낙도는 통영군에 유인도 43개, 무인도 97개 등 1백40개를 비롯, 거제-고성-남해군 지역 등에 모두 유인도 81개, 무인도 3백48개 등 총 4백29개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외지도시인들에게 팔려 방치되고 있거나 웃돈을 얻어 전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섬 매입자들은 매입당시 주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매입후 땅값만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개발공사 등을 이유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오히려 훼손시키려는가 하면 어민들의 생활터진인 공동 어업권까지 차지, 어민들과 잦은 마찰도 빚고 있다.

◇ 개발계획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83년 발표한 국립한려해상공원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全南 麗水市 梧桐島~慶南 南海郡 尙州출장소 錦山~固城郡 下二面 쌍죽~忠武市 도남관광단지~統營郡 閑山面比珍島~巨濟郡 巨濟面 명사~구조라해수욕장 해금강을 잇는 육지 1백28km², 바다 3백30km² 등 모두 4백58km²에 이르는 6개 관광권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85년 국비 1백50억원으로 忠武 도남관광단지에 8만6천평 규모의 방파제와 선착장을 조성했는데 지난 89년 금호개발이 이를 2백억원에 사들여 현재 세계적 규모의 요트계류장 등 위락시설을 만들고 있다.

◇ 투기실태 및 방법

85년 忠武 도남관광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과 釜山 大邱 등 도시인들이 대거 몰려와 섬을 사들이기 시작, 현재 統營郡에서 섬전체가 외지인 손에 넘어간 것은 ▲ 欲知面 좌사도, 내거치도, 봉도, 적도 ▲ 光道面 대섬, 딱섬 ▲ 閑山面 대덕도, 소덕도, 소매물도, 장사도 ▲ 道山面 형제도, 오도 등이며 현지주민 명의로 위장매입한 섬까지 합치면 전체의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섬은 모두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사들인 것으로 땅값은 뱃길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년전 평당 5천~3만원에서 요즘은 40만~80만원으로 30~80배나 치솟았다.

忠武市 S부동산 金모씨(50)는 상당수 섬들이 ▲ 전매를 위한 허위매매 계약 ▲ 인감도용 ▲ 현지인 명의의 위장매입 등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統營郡 閑山面 海竹里 장사도 주민 11가구는 이곳 산4의2, 3일대 1만2천평이 자신들 몰래 韓용래씨(서울 冠岳區 新林洞)에게 이전등기돼 韓씨로부터 이주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수사요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중이다.

◇ 자연훼손

지난 86년 모종교단체가 統營郡 閑山面 국도를 매입, 현재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를 위해 섬 곳곳을 파헤치고 있으며 巨濟郡 一連面 외도도 외지사람들이 매입해 대규모 유희시설을 만들기 위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또 統營郡 閑山面 소매물도도 서울과 忠武 등 외지인들이 매입, 대규모 휴양시설의 건립때문에 본래의 아름다운 경관이 손상되고 있다. (3.29 世界日報)

政府, 生水관리 왜 外面하나

수도물에 대한 불신으로 해서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生水」에 대한 정부의 無策은 현실외면이란 비난을 면할길이 없다.

지난69년 말부터 駐韓외국인을 상대로 공급되기 시작한 생수가 일부 부유층 가정에까지 보급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얘기고, 지금은 아파트지역이나 웬만큼 사는 가정에선 모두 생수를 사서 마시는 실정이다. 생수판매업체도 처음의 한 곳에서 지금은 무허가 업체까지 포함, 무려 2백여 업체가 난립하여 연간 15만여t을 생산, 판매고가 3백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생수시판을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관계법규의 마련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어정쩡한 상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범람하는 생수시판 행위는 현재로서는 不法인 셈이고, 수질관리도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내국인에게 생수를 팔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 들임으로써 정부의 무허가업체 단속마저 완전 중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생수시판은 더욱 활기를 띠고, 특히 폐놀오염사고 이후로는 생수수요가 급증하여 값까지 14%이상 상승하고 약수터가 밤낮없이 붐비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생수시판을 선듯 양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名分論 때문이다. 생수시판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나서면 이는 곧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가 아닌 콜라·사이다같은 「음료수」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고, 수도물의 질이 완벽해질 때를 기다려 그

때 가서나 생수시판을 양성화할 생각인 것 같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도물을 거리낌 없이 마실 수 있을만큼 질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동안 해마다 수도물 오염파동을 일으켜 물 하나 마음놓고 마시게 하지 못하면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생수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로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생수가 시판되고 있고 그 수요가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회적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관장하는 법규와 기준은 있어야 마땅하다.

생수수요가 급증하자 무허가 업자가 덩달아 늘고, 값도 멋대로 올려받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국민들은 그 생수가 어디서 채취되어 공급되는지, 수질은 음용에 적합한 것인지, 용기는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인지,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요인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알아 볼 능력도 없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생수시판 인정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 조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생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유통되던 초기에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확산을 막았어야 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이미 지났다. 더욱이 앞으로는 외국의 생수까지 수입돼 시장을 휩쓸 판이니 이에 대한 대비의 측면에서도 생수관리는 시급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도물의 질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스스로가 비싼 돈 주고 생수를 별도로 사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시판생수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맡아 해야 한다.

(3.30. 중앙일보 사설)